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 <6.1 지방선거 정책제안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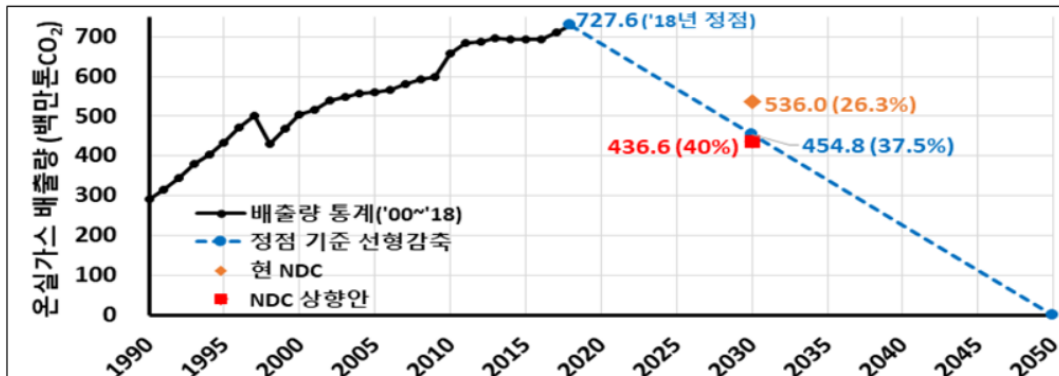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

1.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
2.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 적극 실천
3. 기후환경분야 청년녹색일자리사업 전개

■ 세부 설명

1. 부천시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하고 있다.(4.17%/년 감축) 경제계를 중심으로 “목표가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EU는 최소 55%, 미국은 50%, 일본은 46%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제, 사회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에 이미 천명된 탄소중립 목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인류 생존의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는 에너지전환, 교통, 녹지,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 등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2조 1항)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산된 이후 부천의 민관거버넌스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부천의 미래와 청소년, 청년의 삶에 대해 합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은 시민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탄소중립위원회 등 민관 거버넌스 구성과 탄소중립 조례 제정, 기후에너지과 신설 등 행정체계의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이미 광명시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도심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지역에너지 전환사업, 에너지절약과 효율화사업, 넷카페,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청소년 기후에너지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기후환경분야 청년녹색일자리사업 전개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길이지만 또한 변화를 이루는 혁신의 계기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는 중앙 집중에서 지역분산으로, 대량생산에서 소규모 맞춤형 생산으로, 마구 쓰고 버리는 사회에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며, 이 과정은 창의성과 새로운 실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를 열어가고, 살아갈 청년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이다. 청년들이 기후환경분야라는 블루오션의 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기후환경분야 청년녹색일자리사업'으로 1,000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시도 '기후환경분야 청년녹색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부문

에너지 전환

1.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실시
2. 민관협력을 통한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생산
3. 효율적인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 형성

■ 세부 설명

1.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기후위기는 전 지구인의 당면 과제이며 에너지 자립은 한국 경제의 필수 과제입니다. 시민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포함하여 시민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2. 민관협력을 통한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생산해야 한다.

- 부천시 건축물과 주택 동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건물과 주택을 활용한 최대 발전량을 추정하면 연간 466,191MWh으로 2016년 전력 사용량의 1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은 대기업이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이 수동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에 따른 수익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공공부지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한정된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보급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 공동주택에는 가구별로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옥상에는 공용전기용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3~5kW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해당 가구의 전력 자급이 가능합니다.

3. 효율적인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 우리는 93%의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세계 8위를 차지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구조로** 시급히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 또한 건축물과 교통에서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과 효율화를 지원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형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부문

녹색교통

1. 자전거·보행 부담률 증가 (자전거·보행자 친화도시)
2. 부천시 버스 공영제 실시

3. 대중교통·공공서비스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4.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소, 버스정류장 태양광 시설 신설·확대

■ 세부 설명

1. 자전거·보행의 부담률을 증가해야 한다. (자전거·보행자 친화도시)

-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부천시의 수단분담률은 보행 25.9%, 자전거 2.2%에 불과합니다. 부천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전거·보행자 친화도시'를 목표로 **자전거·보행 수단분담률 증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가 진행한 자전거 도로 모니터링 결과, 자전거 표지판과 도로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시가지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으며, 자전거 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중간중간 끊긴 도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낡은 인프라는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자전거·보행자 도로, 자전거 표지판 등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 부천시는 2016년까지 차 없는 거리 거점을 설정해 시민들의 문화 생활 영위를 위한 공간을 제공했지만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차량 이용량 저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권역별 거점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2. 부천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 부천시는 2021년 기준 7개의 시내버스업체(53개 노선, 847대)가 시내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 노선이 공공이 아닌 민간 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망이 취약한 사각지대부터 버스 공영제를 시행한다면 보행, 자전거, 버스, 유아차, 휠체어 등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복합수단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녹색교통의 확대를 위해 버스 공영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부천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버스 공영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천시의 노선 인수 혹은 대체노선 신설로 인해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운수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여 버스 공영제가 기후위기 대응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버스 사업이 교통망이 취약한 구시가지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대중교통·공공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에 "시장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부천시도 시내버스 차량 전량의 대체 목표를 설정하되, **공영·민간 시내버스 차량을 100% 전기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 부천시에는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타 지자체와 달리 공용차량, 업무용 차량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부천시의 공용차량, 업무용 차량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 공유차 등 공공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부천시 행복카 서비스(공유차)는 현재 전체 차량 대수는 47대, 2021년 8월~12월 동안의 이용률은 19%로 저조합니다. 또한 대다수 차량이 휘발유 차량입니다. 시민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탄소배출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행복카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및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가 필요합니다.

4.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소, 버스정류장 태양광 시설을 신설·확대해야 한다.

- 100% 전기저상버스 대체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선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소, 버스정류장 태양광 시설 등의 설비가 필수입니다. 부천시는 전기저상버스가 **원활하게 차량을 충전하고 운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 버스대기 승객 편의시설, 버스도착정보안내기 등의 운영을 위해선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장의 에너지자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버스정류장 태양광 시설을 신설·확대**해야 합니다.

부문

먹거리

1.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전환
2. 기후시민의 다양한 생태전환 참여기회 확대
3.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 세부 설명

1.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전환을 해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육류소비를 감축하고 채식·저탄소 급식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소비가 급증하면서 사료 생산을 위한 경작지 개

간을 위해 숲이 불타 없어지는 등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숲을 살려 탄소 흡수를 늘리고,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채식·저탄소 급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탄소배출량 감축과 식량안보 대응으로 우리 밀 사용 의무화

밀은 제2의 주식으로 소비량에 비해 우리밀은 2021년 기준 1%를 밀도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수입밀에 비해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등 식량안보 측면에서 우리밀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의 건강, 식량안보를 위해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우리밀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GMO식품 추방으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보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2. 기후시민의 다양한 생태전환 참여기회 확대해야 한다.

-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확대(생태, 체험, 식생활교육 확대)

‘기후위기가 곧 먹거리 위기’라는 인식하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 3기 신도시 대장동의 논·습지를 활용한 생태체험 학습장 마련

3기 신도시로 개발이 되더라도 일부를 ‘야외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여, 도시 어린이들이 뛰어놀며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고,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 도시텃밭 확대 및 상자텃밭에서 우리씨앗 재배 확대

부천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에서 우리씨앗을 직접 재배하고 먹는다면 씨앗도 살리고, 환경에 대한 감수성도 높여낼 것입니다. 저마다의 토양에 맞게 진화해온 토종씨앗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일종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면 한 지역의 농사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토종은 종류가 수십 종이고 지역마다 다른 종자여서 강원도 감자가 병에 걸리면 전남 강진 감자를 가져다 심을 수 있는 것처럼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3.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해야 한다.

- 음식물 쓰레기 감소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음식물 폐기에 따른

탄소발생을 저감시켜야 합니다. 음식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하기 위한 순환체계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문

기후위기와 건강

1. 기후위기에 부천시 의료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
2. 기후-건강 영향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종합 돌봄 시스템 구축

■ 세부 설명

1. 기후위기에 대한 의료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천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건강불평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은 기후위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력과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 부천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4개 지역 중 하나로 공공병원 취약지역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만이 아니라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2. 부천시는 기후-건강 영향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축해야 한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민관 협력 하에 건강, 돌봄, 환경개선 등의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문

도시숲

1. 시민참여형 온라인 트리맵 제작
2.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가로수 관리
3. 공동주택 등 사유지 녹지·수목 관리 지원 강화
4. 새와 꿀벌이 찾아오는 도시

■ 세부 설명

1. 시민참여형 온라인 트리맵을 제작해야 한다.

- 자연녹지가 부족한 부천이 살려면 도심에 숲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숲과 나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가로수, 공동주택, 학교, 상가의 나무까지 파악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동네의 나무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트리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트리맵을 제작하여 도시숲과 개별 수목의 탄소흡수, 대기오염 완화, 에너지 절감,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나무가 도시를 얼마나 덮고 있는지 수관피복율(Urban Tree Canopy)을 중요시하여 나무의 입체적인 양을 최대한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적이며 직관적인 목표와 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2.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가로수 관리로 바뀌어야 한다.

- 탄소흡수원으로서 가로수의 바이오매스(줄기, 가지, 잎 등) 총량이 증대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크게 자란 가로수를 특별히 관리하고, **가로수 제거·바꿔심기·신규조성 승인**과 심의를 강화하고, 무자비하고 과도한 가지치기의 금지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뿌리 생육공간을 보호하고, 적절한 토양을 제공하고, 빗물저장 및 관수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생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가지치기 부산물 및 낙엽 재활용을 위한 퇴비·연료 실용화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 도로를 줄이고 숲을 늘려가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도로의 차량 통행량과 차선을 줄여 가로수가 생육할 수 있는 식재기반을 폭넓게 하고 중앙분리대 녹지를 만드는 등 도로 공간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서 **도시 폭염·열섬현상·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3. 공동주택 등 사유지 녹지·수목 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공기능이 강한 공동주택, 공개공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의 녹지·수목을 공공관리가 가능한 '생활숲'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숲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협력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시에도 바이오매스총량제 적용을 통해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손실에 따른 대체복구 방안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의 산림, 공원뿐만 아니라 시가지 곳곳에서 바이오매스 총량을 늘려야 '**탄소중립도시**', **숲의 도시**'가 가능합니다.

4. 새와 꿀벌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 주택과 도심에 새가 찾아오는 도시를 위해 조류 서식을 위한 공원과 녹지를 재자연화하고, 새를 위한 건물 디자인 마련, 유리창 충돌 방지 대책 시행, 인공새집 및 먹이 식물 제공, 동네 탐조대회 운영 등이 필요합니다.

- 기후위기로 실종된 꿀벌이 되돌아올 수 있는 도시를 위해 공원, 주택가, 학교, 공공기관 등 도심 곳곳에 꿀벌이 좋아하는 꽃을 식재하고 작은 꿀벌정원을 조성하며 도시 양봉을 확대합니다.

부문

자원순환

1. 쾌적한 골목 만들기: 쓰레기수거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
2. 쓰레기 배출 감소: 일상생활에서의 쓰레기 배출 자체를 감소

■ 세부 설명

1. 쾌적한 골목 만들기: 쓰레기수거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구도심의 경우, 대문 앞 골목이 협소하거나 마땅하지 않아 담벼락이나 길가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습 수거 취약지역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습 투기지역이 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배출장소의 쓰레기 배출 지정 요일과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배달음식물 용기 채 투기 등의 문제가 상존합니다.

- 따라서 **취약 지역의 포인트에 맞춤형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2번에서 제안하는 재활용 정거장 운영과 병행하여 상시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실행할 경우 관의 일방적 주도로 결정하기보다는 강연, 토론회, 난상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공론장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관리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또한 분리수거대를 중심으로 거점이 만들어진다면, 문전 수거 방식에서 거점 수거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수거 취약지역의 수거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 쓰레기 배출 감소: 일상생활에서의 쓰레기 배출 자체를 감소해야 한다.

- 현재 인구가 많아 쓰레기 처리만으로도 급급해 자원재활용을 관의 주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돼야 합니다.

- 부천시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활문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모습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모습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으로까지 일회용품 금지가 확대**돼야 합니다.
- 또한 마을에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여 재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주민들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활용 정거장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재활용 정거장 설치지점 선정 및 시행 전 홍보 활동 참여해야 합니다.
- 재활용 쓰레기 주민관리자인 '**자원 관리자**'가 초·중등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참여하여 관내 청소 및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부천시민행동 정책질의서

정당명	후보자명
-----	------

부문	정책요구안	동의 여부 (O,X)	관련 의견 (추진정책 및 추진계획)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	1.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 민간거버넌스를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 적극 실천		
	3. 기후환경분야 청년녹색일자리사업 전개		
	1.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실시		
에너지전환	2. 민간협력을 통한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적극 생산		
	3. 효율적인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 형성		
	1. 자전거·보행 분담률 증가 (자전거·보행자 친화도시)		
	2. 부천시 버스 공영제 실시		
녹색교통	3. 대중교통·공공서비스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4.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소, 버스정류장 태양광 시설 신설		
	1.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		
	2. 기후시민의 다양한 생태전환 참여기회 확대		
먹거리	3.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1. 기후위기에 부천시 의료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2. 기후-건강 영향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1. 시민참여형 온라인 트리맵 제작		
도시숲	2.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가로수 관리		
	3. 공동주택 등 사유지 녹지·수목 관리 지원 강화		
	4. 새와 꿀벌이 찾아오는 도시		
	1. 쾌적한 골목 만들기: 쓰레기수거 취약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자원 순환	2. 쓰레기 배출 감소: 일상생활에서의 쓰레기 배출 감소		

기타의견	추가할 의견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